

EMU 모형에 비추어 본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로*

朴 成 勳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mail: shpark@korea.ac.kr

金 興 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E-mail: hckim@kiep.go.kr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많은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역주의의 불모지라고도 불리던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의 한 축으로 통화통합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유럽통화제도의 운용에 따라 가능했던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가능성을 제어하는 요인이 될 역내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유럽처럼 동아시아도 통화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반여건들이 개선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가 EMU 모형을 따를 경우와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한 통화통합 시나리오의 체계도에 기초하여 동아시아가 선택가능한 통화통합 경로는 대체로 일곱 가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경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나머지 네 가지 통합경로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확대·발전시켜 중기적으로 아시아통화제도와 같은 형태의 환율안정장치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화통합을 모색하는 경로가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용어: 경제통합, 통화통합, 아시아통화동맹, EMU, 아시아통화제도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Alternative paths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in Light of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Sung-Hoon Park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Heungchong Kim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is paper investigates possible paths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After a brief analysis of current discussions on East Asian economic and monetary integration, the paper presents possible implications of Europe's EMU project for East Asia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as constraints on East Asia's way towards monetary integration. The paper argues that whichever paths East Asia selects,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to devise measures that can lead to stability convergence, which was the main success factor for the introduction of single currency in Europe. The paper also presents seven possible paths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and argues that only four of them are feasible strategic choices. The paper concludes that although all these four paths are potential candidates, they have to be complemented by additional policy instruments. The paper suggests these additional measures be targeted at intensifying stability convergence in East Asia,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Euro, the single currency for twelv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fter a brief efficiency and feasibility test the paper selected the option of "develop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to a Multilateral Financing Scheme" as the best short- and medium-term strategy towards monetary integration.

Key words: economic integration, monetary integration, Asian monetary unio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Asian monetary system

I. 서론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역내에 제도적 경제통합기구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은 크게 진전되어 있으나 제도적 경제통합의 불모지로 간주되어 왔었다. 특히, 4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역내무역비중, 처음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고 점차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주도로 진행된 매우 활발한 투자교류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했던 경제발전모델은 유럽연합(EU) 처럼 국가간 조약에 의한 제도적 기반 없이도 국가간 경제교류가 심화되는 시장의 힘에 의한 경제통합의 모범사례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 발발한 아시아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대외경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감지되고 있다. 첫째, 무역투자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수많은 양자간 자유무역지대(FTA)의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지역주의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으로서 1990년대 후반까지 단 하나의 FTA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과 한국은 최근 2-3년간 각각 싱가포르, 칠레와의 FTA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뒤늦게 WTO 회원국으로 합류한 중국도 2010년까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의 FT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FTA 협상, 연구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도로 진행되는 등 동아시아는 실로 FTA의 경연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금융통화의 분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설립 등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 노력,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등 각국이 보유한 외환의 일부에 대한 공동관리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화 노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이 제2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보다 진일보된 차원에서 최근 동아시아에도 유럽의 경험을 본받아 본격적인 금융통화통합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조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역내 환율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관

한 다방면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일부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동아시아에도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도 적지 않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처럼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 지역에는 2차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식민지배 경험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 사실이 아직도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체의 대두를 가로막고 있다. 또 최근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일본간, 즉 역내 양대국간 주도권 경쟁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산업별로 매우 경쟁성이 높은 분야와 보완성이 높은 분야들이 혼재되어 있다. 즉, 위의 요인들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더 나아가서는 통화통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통합을 위한 많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선, 1997년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정책협조와 보다 강한 결속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은 많은 나라들이 통화정책을 포함한 많은 경제정책의 독립적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격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노력들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의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통화통합의 성취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경로의 통화통합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여러 가지 가능한 경로들 중에서 어떤 경로들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가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은 동아시아 통화통합 논의의 배경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유럽의 성공적인 EMU 경험이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과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제어하는 요인인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제Ⅳ장은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로연구에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고 동아시아가 EMU모형을 따를 경우와 따르지 않을 경우 각각에 있어서 선택 가능한 7가지의 통화통합 경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II. 동아시아 통화통합 논의의 배경과 최근 현황

1. 동아시아 금융통화통합 논의의 배경

가. 아시아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인식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통합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처럼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기업들의 직접투자 등 시장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통합의 움직임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동아시아에서도 무역블럭, 즉 제도적 경제통합을 형성하자는 당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동아시아경제공동체(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 설립을 위한 제안 등 몇몇 시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주도권 경쟁, 미국의 견제에 따른 지역경제대국들의 주저 등의 요인들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¹⁾ 단지 1968년 안보협력기구의 성격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출범한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 1990년 초반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로 심화·발전된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소지역주의로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은 수년전까지만 해도 어떠

1) 미국은 당시 출범을 서두르고 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에서의 소지역주의 창설, 동아시아의 결속력 강화에 따른 미국의 영향력 약화 등을 우려하여 EAEC 설립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996년 공식 출범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문제를 공동관심사로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동아시아 국가간 협의체를 비공식적으로나마 만들어내는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ASEM에서 동아시아의 파트너인 유럽연합도 이를 ASEM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Park(2003, Footnote 13 등) 참조.

한 지역무역협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동아시아는 지역주의의 불모지대나 다름없었다고 할 수 있다.²⁾

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이동의 자유화 및 금융시장의 통합이라는 거대 흐름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정책의 독립성, 특히 통화금융정책의 자율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특히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이들로 하여금 유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검토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던 지역협력기구인 아·태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는 위기에 빠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아무런 신속한 도움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APEC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M에 참여하고 있는 EU 회원국 등 선진국들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또 APEC과 ASEM의 협력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2의 위기를 방지하고 위기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구체적인 구현방안을 찾게 되었다.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역투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에 양자간 또는 국지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둘째, 금융통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역내 금융시스템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또는 동아시아 국가와 역외국 사이에 수많은 양자간 FTA가 타당성 조사의 단계에 있거나, 공식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몇몇 협정은 이미 발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금융통화 분야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는 치앙마이

2) Scollay(2001)와 Park(2001)은 동아시아가 지역주의의 지도에서 'empty box'와 'white spot'이라고 각각 불렀다.

3) Park(2003)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관여되어 있는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연구/논의/협상이 20건 이상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발효한 자유무역지대협정이 적지 않다.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로 불리는 역내 상호자금지원제도를 설치하였고,⁴⁾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설립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역투자, 통화금융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조치들 중에서 특히 CMI로 대표되는 상호 유동성지원제도는 유럽통화제도(EMS)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환율조정기구(ERM)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설치되었던 장단기금융지원제도(Short- and Long-term Financing Facilities)와 매우 유사한 장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RM은 EMS 회원국의 중앙은행간 장단기금융지원제도를 보조장치로 하여 EC 회원국 통화사이의 환율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의 하향안정화 및 국가간 수렴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었다. CMI는 EMS와 유사하게 한 동아시아 국가가 여러 동아시아 국가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외환위기사 그 국가는 다른 여러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받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⁵⁾ 즉, 유동성위기에 봉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약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로부터 약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기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상호 유동성지원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향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CMI가 더 발전하여 환율안정을 위한 보다 엄격한 장치 — 예를 들면 EMS를 본받은 아시아통화제도(Asian Monetary System: AMS) — 로 확대 발전된다면, 이는 EMS가 그러했던 것처럼 역내 통화들의 환율안정화와 물가상승의 억제 및 국가간 수렴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크다. 즉, 일반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위한 제반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관측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MI와 동아시아 채권시장 형성 등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통화통합에 대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출범한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독자적인 유동성 지원장치이다. 기존의 ASEAN 5 개국간의 통화스왑협정을 확대 개편하여 총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베이스 지원장치라고 할 수 있다. CMI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그 현황에 대해서는 신관호·왕윤중·이종화(2003, 제II장) 참조.

5) 뒤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CMI가 양자간 유동성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반면, EMS의 금융지원장치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유동성지원장치라고 할 수 있다.

6) 신관호·왕윤중·이종화(2003, p. 23)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의 향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최적통화지역 이론과 동아시아 금융통화통합의 가능성 검토

일반적으로 금융통화협력과 금융통화통합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통화협력은 CMI 및 동아시아 채권시장 설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국들이 자국의 통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환율안정화, 금융시장통합 및 상호유동성지원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금융통화통합은 유로화 도입과 같이 2개 이상의 국가가 궁극적으로 단일통화를 채택하고 단일통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통화금융정책을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통화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Mundell(1961)이 처음 제기한 바 있는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작용하고 있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통화통합을 단행할 경우 단일통화를 채택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공동통화정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의 자율성이 감소 내지는 상실되는데, 회원국들의 경제의 기초여건이 크게 다른 경우 외부의 경제여건이 변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가 손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통화통합시 이러한 외부 경제여건의 변화가 비대칭적인 충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연방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재정조정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유럽의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이 최적통화지역의 전제조건 충족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⁸⁾ 동아시아에서도

7) Mundell(1961)이 처음 최적통화지역 이론을 발표한 후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들은 인플레이 수준의 유사성 여부(Kwan 1998), 교역재의 비중을 통해 본 개방성 정도의 비교(McKinnon 1963) 등을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8) 특히, 15개 EU 회원국 모두가 잠정적으로 EMU 회원국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EMU가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의 주요 결과는

1980년대부터 아시아금융위기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힘에 의한 무역투자 분야의 통합강화,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금융통화협력의 초기적 시도 개시 및 금융통화통합에 관한 논의의 전개 등 일련의 환경변화에 따라 동아시아가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하는가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 중에서 특히 1980년대에 행해진 상당수의 연구들은 동아시아의 엔블럭 형성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소수의 연구결과⁹⁾를 제외하고 많은 연구들은 동아시아가 유럽에 못지않은 최적통화지역 여건의 성숙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엔화를 중심으로 한 엔블럭의 형성이라는 형태로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¹⁰⁾ 이 연구결과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경제가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고려할 때,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본경제와의 결속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의 장기침체에 빠져 들면서 엔블럭 형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결과들은 눈에 띄게 적어졌는데,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는 최적통화지역모형의 회귀분석을 통해 동아시아가 유럽과는 달리 무역과 투자 분야의 경제통합은 비교적 잘 진전되어 있으나 무역 및 산업정책의 차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경험의 근본적인 치유 부재, 일본-아시아-미국간의 삼각무역구도 등의 요인 때문에 최적통화지역으로의 발전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¹¹⁾ 즉, 이는 1980년대 발표된 엔블럭 형성 옹호론자들의 연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연구결과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Kang & Wang(2002)에 잘 정리되어 있다.

- 9) Frankel & Wei(1993)의 경우 동아시아의 환율정책에서 달러화의 정책영향도가 엔화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아시아가 엔블럭이라기보다는 달러블럭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으며, Taguchi(1994)도 아시아 국가들의 이자율, 주가,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일본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운 변화를 보여 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10) 유럽과의 비교연구는 주로 Goto & Hamada(1994), Kwan(1998), Eichengreen & Bayoumi(1996)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 11) 김태준·유재원(1999) 참조.

2. 동아시아 금융통화통합에 관해 제기되었던 구체적인 방안들

엔블럭의 형성에 관한 1980년대와 1990년대 연구들의 상반된 연구결과와 더불어 특히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금융통화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이 제기되었고 또 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금융통화통합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대체로 다음의 네 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다.¹²⁾

가. 아시아통화기금 설치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은 일본이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평가절하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 역내 국가들의 외화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고 IMF가 제공하는 구제금융을 보완할 목적으로 IMF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일본은 소요되는 총 기금 1,000억 달러의 50%인 500억 달러를 출연하고 그 나머지는 한국, 중국, 아세안 회원국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AMF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IMF 및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하였다. 즉, 미국과 IMF는 AMF의 창설이 아시아에 IMF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국제금융기구를 이 중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이 경우 기존 IMF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및 금융 위기시 IMF가 제공하는 구제금융에 첨부되는 구조조정 요구(conditionality)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MF의 설치에 반대하였다.¹³⁾ 뿐만 아니라 일부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이 금융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을 구제할 목적보다는 AMF의 창설을 통해 엔화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을 경계하여 이 제안에 반대한 바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AMF 창설시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

12) Jeong & Mazier(2004)는 동아시아 지역에 필요한 환율정책적 협조의 관점하에 복수통화 바스켓, 엔블럭, 아시아통화단위의 도입 등 세 가지를 가능한 정책대안들로 제시하고 있다.

13) 이에 관해서는 이재승(2001), 김태준·유재원(1999) 참조.

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는 그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였는데, 그 결과 IMF의 정책감시기능을 보완하는 역내 정책감시기능의 도입, 금융시스템 및 감독기능의 강화를 위한 협조 및 새로운 협조금융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닐라 기본합의서(Manila Framework)를 채택하게 되었다.

나. 신미야자와 구상(New Miyazawa Initiative)

AMF 구상이 무산된 후 일본은 1998년 7월 미야자와 대장상의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을 통합하여 펀드를 형성함으로써 투기적 단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야자와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또한 미국과 IMF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그해 10월 경제 위기에 빠진 아시아 5개국의 경제회복과 성장력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新미야자와 구상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신미야자와 구상에서는 총 300억 달러를 일본이 단독으로 출연해서 형성될 미야자와 기금 설치를 통해 단기, 중장기 외화유동성 및 경제회복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또한 AMF 구상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미야자와 구상을 통해 엔화의 국제화 및 이를 통한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¹⁴⁾ 신미야자와 구상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역내 유동성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미국, IMF 또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IMF 구제금융을 활용하고 있던 대부분의 위기 당사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아시아통화제도의 설치

아시아통화제도(Asian Monetary System: AMS)의 설치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통화제도(EMS)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¹⁵⁾

14) 예를 들면, 김태준/유재원(1999) 참조.

1979년 출범하여 당시 유럽공동체 회원국 통화간의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EMU 출범 직전까지 운용되었던 EMS는 EMU 출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배경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MS의 요체로 작용했던 환율조정기구(ERM)의 성공적인 운용에 기초하여 “hard-ERM” 기간이라고 불리는 EMS 후반기(1986~1992년)에 독일 마르크화의 안정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조성된 회원국 경제의 안정화 수렴(stability convergence) 경험¹⁶⁾은 EMU 도입을 위한 수렴조건에 관한 EU 회원국간의 협상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¹⁷⁾

이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에 단일통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안정화공동체의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즉, 이 안정화 방향으로의 각국 경제의 수렴은 앞에서 분석한 최적통화지역 전제조건 중에서 비대칭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통화 도입을 위해서는 AMS와 같은 환율협력체제가 필수불가결한 전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반하여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역순에 의한 단일통화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도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라. 동아시아통화동맹의 창설

동아시아통화동맹(Asian Monetary Union: AMU)은 1999/2002년 유로를 단일통화로 채택한 유럽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 단일통화를 도입하고 공동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전통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한 무역과 투자 분야의 통합에 중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 및 통화 분야의 통합을 시도하는 작업은 아직도 일천한 단계이다. 특히, 통합(integration)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협

15) 이에 관해서는 특히 윤덕룡 외(2002) 참조.

16) Angeloni/Dedola(1999)는 EMS의 운용기간을 3개의 기간으로 세분화하고 제1기(1979~1985)를 ‘soft-ERM 기간’, 제2기(1986~1992)를 ‘hard-ERM 기간’, 그리고 제3기(1992~1998)를 ‘pre-EMU 기간’이라고 칭하면서, 특히 제2기에 안정화공동체의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7) EMS에서 EMU로 이행하는 과정에 관한 경제적 분석에 관해서는 Emerson et al.(1992)를 참조.

력(cooperation)의 단계도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통화스왑 방식을 통해 상호유동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가 유일하게 눈에 띄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의 EMU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에 걸친 유럽통화제도(EMS)의 운용에 따라 나타난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화수렴 경험이 단일 통화의 도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조차도 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아시아통화동맹의 조기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단일 통화의 도입이 Eichengreen(1997)이 설파했듯이 “정치적 책임의 공동관리(pooling of political responsibilities)”를 의미한다면, 이를 위한 경제통합의 경험 등의 전제조건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¹⁸⁾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아시아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은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통합의 단계를 상징하고 있는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¹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동아시아에 단일통화를 도입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유럽처럼 장기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 또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유럽과 아시아의 제반여건상 차이를 고려할 때, 모든 회원국들이 같은 시점에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했던 EMU 모형에 따르기보다는 동아시아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소규모 통화동맹을 일단 만들고 여건이 성숙된 후 이들을 통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²¹⁾

18) Eichengreen(1997)은 정치적 연대(political solidarity)를 위한 역사적 경험의 부재, Jean Monnet와 같이 아시아 통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부재, 공동체도의 확립과 적용을 보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근본적 시각 차이 등을 들어 아시아에서의 단일통화 도입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적으며 장기적으로나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19) Balassa(1961)를 주로 참조.

20) 신관호 외(2003) 참조.

21) 예를 들면, Nuo Ing(2003)은 동아시아에 경제여건이 유사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 통화동맹을 일단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극복한 후 장기적으로는 이 소규모 통화동맹들을 통합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통화동맹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간,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입되어 있는 양자간-지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매우 초기적이기는 하지만 CMI로 대표되는 금융통화협력의 개시 및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출범 등 경제통합의 여건이 급속하게 개선되면서, 전통적인 경제통합의 단계를 뛰어 넘어 역순의 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경제통합이론에서는 자유무역지대에서 공동시장에 이르는 통합과정을 비대칭적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단일통화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역순의 통화통합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경제통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과정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주권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일단 단일통화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 최적통화이론에서 주장하는 전제조건들은 단일통화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충족될 수도 있음을 이 연구들은 주장하고 있다.²²⁾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역투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급증하는 양자간 FTA협정의 체결 외에도, 금융통화 분야에서도 협력 및 통합을 위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경험이 주는 시사점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다음 장에서 논의할 분석은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시도의 성패를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EMU 모형의 시사점 및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유럽이 추진했던 EMU 모형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제어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

22) 이에 관해서는 Shin and Wang(2002) 참조.

적 특성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EMU 모형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EMU 모형을 '유럽통합의 진전과 함께 성숙된 제반여건에 기초하여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EU 회원국들이 일정한 시점을 기하여 일제히 단일통화를 채택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하여 통화통합을 완성한 모형'²³⁾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EMU 모형은 첫째, 성숙된 정치적, 경제적 제반여건을 기초로 하였으며, 둘째, 일정한 가입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EU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수렴을 시도했으며, 셋째,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EU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을 규정하는 국가간 조약을 통해 가입을 추진하였고, 넷째, 일정시점을 기해 모든 가입국에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등 네 가지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EMU 모형이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통화통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EMU의 도입과정에서 1979-1998년의 기간 동안 운용되었던 유럽통화제도(EMS)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²⁴⁾ EMS는 유럽통화단위(ECU)의 채택, 환율조정기구(ERM)의 설치 및 중앙은행간 신용공여제도의 구축 등 세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ERM을 통해 회원국 통화 사이의 환율안정화, 개별회원국내의 인플레이션을 및 이자율의 저하, 그리고 이 거시경제변수들의 회원국간 수렴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였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EMS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

23) 1999년 1월 1일을 기하여 단일통화인 유로가 채택되었을 당시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만이 참여하였다. 영국과 덴마크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조인하기는 하였으나 동 조약이 발효되기 전 국내여론의 반대에 따라 수렴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가입선택권한(opting-out right)을 인정받았으며, 그리스는 가입조건심사에서 탈락하여 EMU에 가입하지 못했다. 스웨덴의 경우 EU에의 가입시점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1993년 11월) 이후인 1995년이어서 영국과 덴마크처럼 후속협상을 할 여지가 없어 EMU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으나, 가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조건 중 ERM 가입 및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조건을 의도적으로 충족시키지 않아 EMU에 가입하지 못했다.

24) 예를 들면, Apel(1998), Emerson et al.(1992) 및 윌터롱 외(2002) 등이 있다.

25)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Angeloni & Dedola(1999) 참조.

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동아시아가 EMU 모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EMS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체로 다음에서 논의될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안정화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최적통화지역의 전제조건 충족 노력

최적통화지역 이론이 주장하고 있듯이 두 나라 이상을 대상으로 한 단일통화의 도입은 이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면 상이할수록 외부적 경제충격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크게 한다. 따라서, 각국이 자국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충격이 있을 때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단일통화를 도입할 경우는 충격의 비대칭적인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EMU에 참여한 국가들이 모두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하는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EMS의 성공적 운용을 통해 형성된 안정화공동체가 최적통화지역의 형성을 위한 환경여건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일통화의 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안정화공동체의 형성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정책주권의 제약을 '정책주권의 포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책의 공동관리'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함양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즉, 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그 과실이 약소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자세가 형성되고 또 보다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일정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음도 사실이다.²⁶⁾

따라서, 동아시아에서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역내 경제들의 안정화 수렴을

26) 이러한 사실은 EC의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별 출연비율 및 농업예산지출, 유럽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지출비율 및 EU 지출의 회원국 GDP에 대한 기여비율 등을 비교해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면, 1994~99년의 기간 중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자국 GDP의 3.7%, 2.8%, 4%, 1.7%를 EU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국가이면서도 공동농업정책의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서는 Wallace & Wallace(2000) 및 김세원(2004) 참조.

유도하는 정책조치들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아시아 통화제도(AMS)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금융위기에 의해 가능해진 지역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채택된 치앙마이구상(CMI)의 발효 및 최근 들어 성사된 동아시아채권시장의 출범 등을 고려할 때, AMS 도입을 위한 동아시아의 여건은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재 금융위기지 양자간 상호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통화스왑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CMI를 다자간신용공여장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의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다.²⁷⁾ 그리고 EMS처럼 회원국 통화 사이의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환율 변동폭을 도입한다든지,²⁸⁾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된 공동신용장치(credit facilities)를 도입한다든지, EMS에서 ECU가 했던 역할을 본받아 ACU와 같은 공동화폐단위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CMI를 보다 포괄적인 통화협력체도로 격상시킴을 통하여 실질적인 차원에서 EMS와 유사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환율협력체제의 선택 및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필요성

동아시아에서의 통화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992~93년의 기간 중 즉, EMU 형성과정에서 유럽의 주요국 통화를 중심으로 발생한 외환시장의 위기가 통화통합에 주는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또 동아시아가 AMS와 같은 환율안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이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U의 경우 외환위기의 시점이 회원국간 (준)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함으로써 변동폭을 갖는 고정환율제도가 환투기에 취약함을 새로이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오히려 회원국 통화 사이의 환율변동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단일통화의 도입을 위한 회원국내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는 교훈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27) 이에 관해서는 <http://blog.empas.com/japankorea114/813673>을 참조.

28) 이재승(2001)은 역내 통화 상호간의 환율변동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역외 통화에 대해 자유변동을 허용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서 진행될 통화통합을 포함한 통화협력프로그램의 목표가 단지 제2의 금융위기를 막는 데 두어질 경우 유럽에서 활용되었던 환율조정기구(ERM)는 오히려 취약한 구조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AMS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고정환율제도가 '달러화(dollarization)' 또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등 강한 페그를 실시하지 않는 한 태생적으로 완전한 환율안정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즉, 동아시아가 AMS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경우에도 그 궁극적 목표를 단일통화의 도입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다. 무역통합과 금융통화통합의 선후관계를 아시아적 시각에서 재검토

만약 동아시아에 AMS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AMS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가를 주도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Balassa(1961)가 제시한 경제통합의 제 단계를 제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통화통합의 필수조건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Shin & Wang(2002)과 같이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AMS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요컨대, AMS가 필요한 이유가 동아시아를 안정화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다면, 자유무역지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이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거치지 않고도 AMS를 도입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일통화를 도입하는데 합의하더라도 역내의 정치경제학적 환경 하에서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경우, AMS 출범 등 금융통화통합을 선행함으로써 안정화공동체의 형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를 위한 보다 전향적

29) 이에 있어서는 Wyplosz(2004)가 제시한 "two-corner solution"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최근 같은 자본자유화의 여건 하에서는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나 달러화/통화위원회 같은 매우 강한 고정환율제도가 아닌 그 중간의 어떠한 환율제도도 원칙적으로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통화의 도입은 강한 페그제도보다 더 강한 고정환율제도이므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협력을 진행할 경우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략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라. 장기마스터플랜의 마련

AMS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들이 안정화공동체로 나아가는 제반 조치들에 합의할 경우, AMS 도입 및 그 이후의 단일통화 도입 단계까지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1970년의 베르너보고서, 1989년의 들로르 보고서가 바로 그 역할을 했었는데,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의 정책담당자 및 국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이 단계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매우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때, EMU 도입을 위해 활용되었던 협상기법³⁰⁾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에서 행해진 EMU협상을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면, 협상이 형식적으로는 국가간 협상³¹⁾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국가간-국내 협상을 포괄하는 매우 다층적인 협상이었으며,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유사한 이해관계를 보인 이해집단들끼리 연합하여 다른 이해집단을 설득 또는 위협하기도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 협상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필요한 장기마스터플랜의 준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³²⁾

마. 핵심적 추진세력의 확보

AMS의 도입과 단일통화의 도입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참여화된

30) 이에 관해서는 Dyson & Featherstone(1999) 및 김홍중·박성훈(2004)을 참조.

31) 유럽통합의 역사에서 주요 안건에 관한 국가간 협상은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라고 불리우는 협상기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정부간회의의 결과는 대부분 국가간 조약으로 구체화됨. EMU협상의 경우도 그 결과가 1993년 공식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포함되었다.

32) EMU협상이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서는 김홍중·박성훈(2004)을 참조.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참여국 사이에 다양한 국가연대가 생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국가연대도 구체적인 협상의제에 따라 합중 연횡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할 경우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소수의 국가들이 강한 연대를 형성하여 통합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이 지역에서의 통화통합은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경우 EMU 협상과정에서 독일-프랑스의 긴밀한 양국관계가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동아시아에서도 협상에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주도세력을 형성하는 작업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가 단일통화의 도입이라는 장기 비전에는 동의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정치동맹과 통화 동맹간의 관계설정 등 개별 협상의제에 있어서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EMU 협상과정에서 건설적인 양보 및 타협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독일-프랑스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1950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경제통합의 제 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우호관계로 발전된 사실은 과거사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3국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희망을 갖게도 한다.

동아시아 단일통화를 위한 주도세력의 형성에 있어서는 동북아 3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제2의 경제대국 및 세계 제3의 무역대국으로서, 중국의 경우 최근 가장 역동적인 성장력을 보이고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의 경우 GDP 및 무역 면에서 공히 세계 13위권에 위치한 국가로서 제각기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들 간의 긴밀한 협조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과 동북아 삼국간의 관계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럽이 활용했던 양자관계와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간의 긴밀한 삼국관계가 오히려 보다 효과적인 추진력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2.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유럽의 단일통화의 도입과정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작

용하지만 정치적인 고려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³⁾ 따라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도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실현가능성과 대안의 설정 등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 살펴 본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및 금융통화통합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앞 절에서 분석한 EMU의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특성을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가.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체제의 다양성에 따른 국가간 입장차

동아시아는 우선 단일통화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유럽과 비교할 때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체제의 다양성이 훨씬 크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통합과정에서는 초기에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고 무역결합도가 상대적으로 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룩스 3개국의 최초 6개국(Original Six)이 통합을 선도하였고, 그 이후 5차례에 걸쳐 회원국을 확대하여 현재 25개 회원국을 둔 유럽연합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최근 가입한 동구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가 선진공업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단일통화의 도입과정에서는 EMS의 설치 및 수렴조건의 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통하여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안정화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유사성 및 공조화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천적인 의미에서 공동통화의 도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단일통화를 도입할 때까지 오랫동안 선진국 중심의 통합을 추진해 온 데 반하여 이제 경제통합을 시작하려는 동아시아는 선진국인 일본, 개도국에서 산업국으로 이행한 경험을 가진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아직 개도국으로 남아 있는 ASEAN 회원국 및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경제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등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특히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경우 주요 협상의제에 관한 협

33)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도입을 위해 진행된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적 요인의 체계적 분석에 관해서는 김홍중·박성훈(2004)을 참고하기 바람.

상국별 입장의 차이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타협점을 찾는 작업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다양성을 극복하는 것이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본격적인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과거사의 불완전한 극복에 따른 추진력의 결여

동아시아는 통화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럽과 마찬가지로 침략과 전쟁의 어두운 근대사를 가지고 있으나, 유럽과는 달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독일의 국가전략이 유럽 대륙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공영권 건설이라는 일본의 국가전략이 유럽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냈었다. 즉, 유럽 국가들이 유럽대륙에서 새로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공동번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통합을 시작하여 이를 궁극적으로는 단일통화의 도입이라는 경제통합의 최고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켰듯이 동아시아도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극복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독일과 프랑스간 양국관계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사의 극복을 통한 국가간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사의 극복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간 공동체의식의 형성도 매우 더딘 상태이다.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생겨난 위기국가간 정책공조가 그나마 최근에 관측되고 있는 조그만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도되었던 EAEC 등의 통합노력들도 커다란 탄력을 받지 못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APEC과 ASEM도 최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외교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일본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문제 및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은 통화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즉,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획기적인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제도적 경제통합 경험의 부재에 따른 장기 비전 설정의 어려움

FTA 성격의 유럽경제공동체의 결성 ⇒ 관세동맹으로의 발전 ⇒ EMS의 실행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수렴도의 증가 ⇒ 공동시장의 도입 등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통화통합을 도출하기 위해 EC 회원국들이 추구한 일련의 통합 조치들을 고려할 때, 유럽의 단일통화 도입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일관된 비전 하에서 추진된 후 성사된 장기통합프로그램의 결과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70년 제시되었으나 최종목표인 통화통합의 달성에는 실패한 베르너보고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경제여건의 변화 또한 유럽 국가들이 합의했던 몇 차례의 중요한 통합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정책담당자들의 통화통합이라는 장기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성공적인 단일통화 도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동아시아는 아직도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FTA조차도 출범시키지 못한 단계에 있으며,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측에서도 이를 어떠한 장기 비전 하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해 실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들은 통화통합의 실현에 있어서 역량을 분산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동아시아의 주요국들이 1990년대 중반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통합과 이를 통해 다져 질 결속력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제의 출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한 점은 동아시아에 통화통합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부정적, 긍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경제통합, 더 나아가서는 통화통합을 지향하는 장기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라. 안정화공동체 경험의 결여에 따른 경로선택의 어려움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유럽의 단일통화 도입에 있어서는 특히 EMS에

의해 성공적으로 정착된 EU 회원국들의 경제안정화 수렴기조의 정착, 즉 안정화공동체의 대두가 매우 중요한 경험적 조건으로 작용한 바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아직 결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MS와 유사한 통화협력 및 더 나아가서는 통화통합프로젝트를 개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경제통합의 첫 단계인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통화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성사시킨 후에야 비로소 통화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경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들이 실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동아시아도 비대칭적 충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무역통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MS와 같은 환율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통화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됨을 역설하고 있다.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칭적 충격의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즉, 안정화공동체의 경험이 거의 없는 동아시아는 통화통합의 경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마. 핵심적 추진세력(국가연대) 구축의 어려움

유럽의 통화통합은 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두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형성되었던 긴밀한 양자관계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독일-프랑스 양국은 과거 여러 번의 전쟁에 의해 1930~40년대까지만 해도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넓게는 유럽의 경제통합, 그리고 좁게는 단일통화인 유로의 도입에 있어서 두 나라가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비전공동체를 형성하여 다른 EU 회원국들을 적극적인 통합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³⁴⁾

이에 반해 동아시아에는 이러한 긴밀한 양자관계(또는 삼자관계)의 생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일본,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한국의 삼국관계의 발전에 있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34) 김홍중·박성훈(2004)은 이러한 '핵심적 양국관계(key bilateral relations)'가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자세 및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처럼 핵심적 양자관계를 형성하는 작업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국가의 통화들 중에서 가장 국제화가 진전된 엔화를 보유한 일본을 배제하거나, 2010~20년 기간 중 일본의 GDP 규모를 능가하는 경제 규모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배제하는 어떠한 핵심적 양국관계의 형성도 통화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일본과 중국이 핵심적 양국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재 양국간의 커져 가는 경쟁의식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의 극복 등을 통해 통화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은 동아시아 단일통화의 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³⁵⁾

IV.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한 경로

1. 통화통합 시나리오의 기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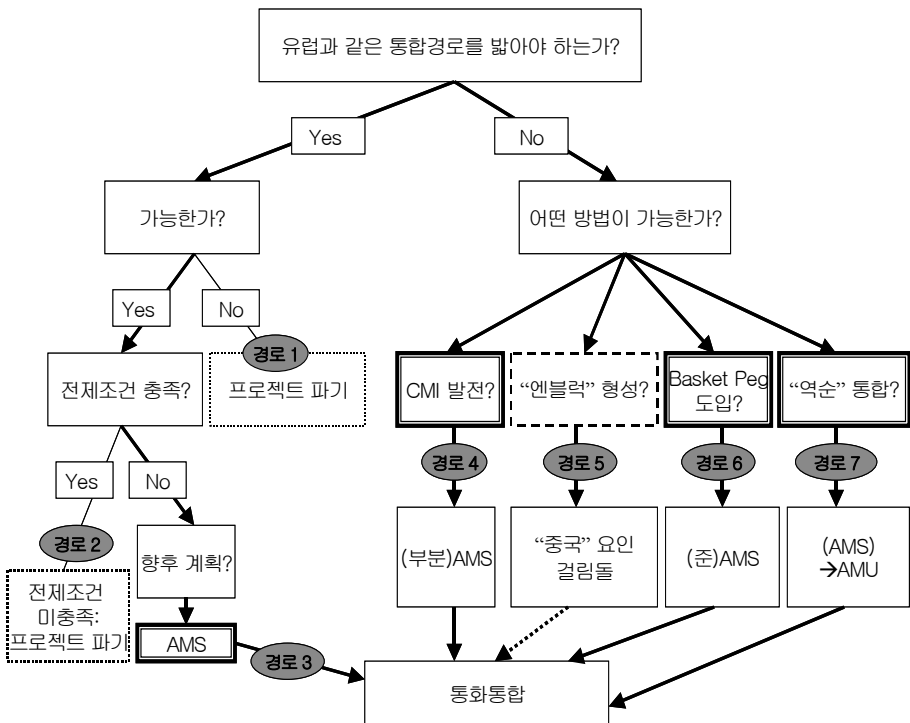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된 EMU 모델이 주는 시사점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정치경제학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한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은 체계도에 기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의 체계도는 성공적인 통화통합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같은 통합경로를 밟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중반 개시된 본격적인 경제통합이 단계적인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40~50년 후 단일통화의 도입으로 발전한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막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눈을

35)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정치 순환과 경제 순환의 관계이다. 정치 순환(political cycle)이 하강하는 경기 순환(downturn business cycle)과 일치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 순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 - EU 집행위 DG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관계자 면담 자료.

였으며, 현재 동아시아FTA도 논의는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하는 통합의 초기단계에 있다. 하물며 FTA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통화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통합에 대한 장기 비전의 제시, 각 단계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확정 및 대외적 여건과 대내적 여건에 관한 주도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관한 경제적·정치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체계도를 설정하고 각각의 가능한 경로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시나리오는 동아시아가 우선 유럽의 EMU 모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EMU와는 다른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할 것인가에 관한 확고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보여 주

<그림 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한 경로 모색을 위한 체계도



고 있다. 만약 동아시아가 EMU 모형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유럽에서 EMU가 가능하도록 기여했던 제반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두 가지의 경로(「경로 2」와 「경로 3」)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아시아가 EMU 모형을 따르기 보다는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모형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EMS가 제공했던 안정화공동체의 소중한 경험은 되도록 아시아에서도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의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통화통합의 경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경로 1~7의 일곱 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안정화공동체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들 경로의 장단점과 실행방안 등을 상세하게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EMU 모형에 따른 경우의 동아시아 통화통합 경로

이 경우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선 유럽과 유사한 경로를 밟는 것이 가능한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유럽통합 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동아시아의 통화통합 프로젝트는 폐기되어야 하며 (「경로 1」),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별국가간 FTA, 동아시아 차원의 FTA, 상호자금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거나, 통화통합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 EMU 모형의 적용 가능성 검토

유럽과 유사한 통화통합이 가능한가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은 대략 경제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우선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아시아가 최적통화지역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동아시아가 아직은 최적통화지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즉, 동아시아에서는 경기순환(business cycle)의 공조화(synchronization)가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국가간 인력이동이나 재정지원제도가 정

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수준에도 국가간 많은 차이가 있는 등 단일 통화 도입시 비대칭적 충격의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조기실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겠다.³⁶⁾ 최적통화지역과 다소의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과연 동아시아에 단일통화를 도입할 만큼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10여 년간의 EMS 운용에 따라 축적된 환율공조의 경험과 EMU의 준비과정에서 참가희망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던 자본 및 금융시장자유화 조치들에 따라 이러한 전제조건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충족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³⁷⁾ 동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³⁸⁾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경제통합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간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통화 분야에 있어서도 아시아금융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 2000년 이후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참여하여 출범한 CMI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채권시장의 통합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등 경제통합과 통화통합을 위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초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인 여건의 형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연 어떤 방법 및 경로를 통해 과거사를 극복하고 정치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응집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36) Shin & Wang(2003)은 동아시아의 경우 무역량의 증가가 곧 국가간 경기순환의 공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그보다는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증가가 경기순환공조화의 가장 중요한 채널로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통화통합 이후에 산업내 무역이 증가할 경우 통화통합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7) EMS의 운용기간별 경제수렴도 증가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결과는 Angeloni & Dedola(1999)를 참조.

38) 예를 들면, Chan-Lee(2004)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아직 동아시아가 좁게는 환율공조(common float), 또 넓게는 공동통화를 도입할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고구려사 왜곡 사례 등은 최근에도 동아시아 국가간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경제로의 급부상에 따라 일본-중국 양국간에는 향후에도 동아시아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관계의 상존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통화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러한 국가간 정치역학관계는 하루아침에 불식시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동아시아 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주변여건 및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통합경험을 동아시아의 통합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면, 바로 '유럽 국가들이 유럽대륙에서의 전쟁재발방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면서도 그 수단으로서 경제통합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즉,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또 이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관계를 약화 내지는 해소하고, 또 이를 통해 통화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가 유럽과 유사한 통합경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 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이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림 1>의 「경로 2」와 「경로 3」을 선택하게 된다.

만약, EMU 모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통화통합의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무역·투자 부문에서의 통합을 진전시키고 CMI 및 채권시장 통합 등의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EC 회원국들이 단일통화를 도입하면서 주장했던 '유로화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경제통합 노력의 논리적인 종착역'이라는 시각이 동아시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림 1>의 「경로 1」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에서 언급된 몇몇 협력프로그램들의 편익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으며, 또 동아시아 통화들의 환율변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무역·투자통합마저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³⁹⁾ 특히,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지금과 같이 고도로 통합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하에서 (준)고정환율제도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양립시키는 데 매우 커다란 제약이

39) 이와 관련하여 Eichengreen(1993)은 환율변동이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긍정적 효과인 무역증진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통합에 대한 강한 저항이 생겨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따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이 또다시 금융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통화통합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이 이처럼 클진대 통화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EMU 모형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충족여부 검토: 「경로 3」의 선택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럽의 통화통합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정치적 판단이 내려졌다면 차후에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은 동아시아가 현재 시점에서 유럽의 통합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이에 대해 긍정적인 해답이 가능하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본보기 삼아 중장기 통화통합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따라 동아시아의 현실을 돌아보건대 그 전제조건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이제 막 그 첫 단계를 실험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며,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무역통합,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하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과 같은 전제조건이 동아시아에도 충족되어 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경로 2」는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즉,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림 1>의 「경로 3」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경로 3」에 따라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럽 국가들이 1950년대에 벌써 모범적으로 보여 주었던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협력의 여건을 조성한 후 가능하면 유럽통화제도를 본받은 아시아통화제도(Asian Monetary System: AMS)를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⁴⁰⁾ AMS는 EMS처럼 주요 동아시아 통화들간의 환율변동을 일정 변동폭 내로 제한하는 환율조정기구(ERM)와 환율조정기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

40) 유럽의 오랜 경제통합 경험은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단일통화의 도입을 무역증진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공고한 경제공동체로 발전됨으로써 경제통합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중요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에 있어서 경제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해 필요한 각국 중앙은행간의 각종 신용공여제도(Credit facilities)를 근간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EMS에서처럼 아시아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 ACU)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가간 중심환율과 그 변동폭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앞서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AMS가 EMS처럼 동아시아 경제들 간에 '안정화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이를 통해 역내 국가들이 통화통합을 '통화주권의 포기'라기보다는 '통화정책의 공동관리'라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이다. 만약 이러한 기초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동아시아 국가들도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종래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시각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자유무역지대-->AMS의 운용은 EMU 모형을 따를 경우 통화통합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로 3」을 채택하여 EMU 모형을 활용하려고 할 경우 유럽과 동아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여건상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회원국들이 같은 시기에 단일통화를 채택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유럽통합의 전반적인 추진이 위협을 받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 EMU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연 이러한 의무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은 EMU 모형을 따르기보다는 여건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여러 개의 소규모의 통화동맹을 만들어내고, 일정기간의 경험을 축적한 후 이들 간의 통합을 시도하거나(Nuo Ing 2003), EMU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었다가 채택되지 않았듯이 소수의 핵심 국가들간의 통화동맹을 먼저 실현하고 다른 나라들은 여건이 성숙하면 개별적으로 통화동맹에 가입하는 'two-speed AMU'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아시아의 여건상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단일통화를 채택하는 「경로 3」은 실현가능성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EMU 모형 외의 동아시아 통화통합 경로

만약 앞의 시나리오와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통화통합 모델이

아닌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단일통화를 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통화통합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통화통합 방안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양자간 상호자금지원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CMI를 확대·발전시켜 이를 통화통합을 위한 중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경로 4」) 둘째, 일본의 엔화를 기축통화로 삼는 소위 '엔블럭(Yen Bloc)'을 형성한 후 완전한 통화통합으로 가는 방법의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득실은 어떠한가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경로 5」) 셋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세계 주요 통화들을 일정 비율로 섞어 조합한 형태의 복수통화바스켓을 설정하고 각 통화의 환율을 이 통화바스켓의 환율변동에 연동시키는 소위 'multi-currency basket peg'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통해 각국 통화 사이의 환율공조체제 형성 가능성을 일정기간 실험하고 그 이후 궁극적으로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또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경로 6」) 끝으로, 역순(Reverse Sequencing)에 의해 통화통합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동아시아 FTA에 의한 무역통합(또 AMS에 의한 환율공조)의 경험이 없이 곧바로 단일통화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있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경로 7」)

이 대안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단일통화 도입 이후에 동아시아가 지금까지와 같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가 단일통화의 도입을 통해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단일통화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외부적 충격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역내 국가들의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고도의 경제학적인 분석을 요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특히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는 선에서 만족하고, 보다 정직한 경제학적인 분석은 후속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이러한 제한성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네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에 있어서는 유럽의 통화통합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럽통화제도(EMS)에 의한 안정화공동체 정착의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논거로 삼고자 한다. 즉, 비록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통화통합 모델이 아닌 독자적인 경로에 의한 통화통합에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안정화공동체’의 정착 없이는 통화통합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대안들의 ‘안정화공동체’에 대한 기여가능성에 논의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가. 「경로 4」: CMI를 심화·발전시키는 방안

CMI는 기본적으로 ASEAN+3에 속하는 13개국 중 주요국끼리 체결한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해당국 통화가 급격한 평가절하 등 위기에 처할 경우 스왑 협정 범위 내에서 상호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년 9월 현재 총 16개의 양국간 스왑 협정이 발효 중이며, 이에 따른 상호자금지원총액은 약 440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⁴¹⁾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일통화를 향한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CMI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MI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양자간 상호자금지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CMI를 ASEAN+3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다자간 자금지원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양자간 자금지원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모든 ASEAN+3 회원국들이 다른 12개 회원국과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맺을 경우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 작업은 현재 진행된 경과를 고려할 때 매우 긴 기간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3개국의 공동보조와 공동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것과는 그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41) 아직 ASEAN+3의 경제통화협력력을 위한 사무국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ASEAN+3 관련회의에서 논의되는 공식문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사용한 통계치는 Kawai & Kuroda (2004)에서 인용한 것이다.

또, 1997~1998년의 기간 중 동아시아, 브라질, 러시아 등 세계 곳곳의 대규모 금융위기의 발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환율변동을 보인 유럽 통화들의 경우 1999년 초 유로화 도입을 위한 모든 회원국들의 강한 약속 때문에 국제투자자본이 선불리 EU 회원국 통화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안정화를 기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의 CMI 운영형태인 양자간 협정들을 다자간협정으로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강한 결속력을 과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정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⁴²⁾

둘째, 다자간협정으로의 발전과 함께 현재 16개 양자간 협정에 따라 총 440억 달러의 규모로 되어 있는 CMI를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인 환율안정 효과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Wolf(2004)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최소한 10배 정도로 확대된 상호자금지원체제를 가능하면 아시아통화기금의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IMF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규모의 취약성과 구성회원국들의 이기적 행동 및 동아시아의 상대적으로 약한 자본시장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 금융위기에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³⁾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CMI를 확대발전시키든, 이러한 조치들의 중간목표는 환율공조체제의 형성을 통한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이어야 하며, 또 궁극적으로 이 조치들은 단일통화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환율안정화에 필요하다면, EMS처럼 환율 변동폭을 도입하고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다자간 자금지원체제를 재구축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Kuroda(2004)가 제안한 방안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는 특히 2004년 5월 아시아 개발은행의 제37차 연차총회의 공식일정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일본정부 대표로 참가하여 'CMI를 강화하고 그 이후의 몇 단계를 거친 후 궁극적으로 단일통화를 형성하는 방안을 장기프로젝트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

42) Nuo Ing(2003)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CMI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3) Wolf(2004)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시아통화기금을 창설하여 동아시아의 대외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함을 역설하고, 이에 있어서 중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44)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제37차 연차총회 정례회의에서도 현재 양자간 상호금융자금지원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치앙마이 구상을 다자간 금융협력의 형태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MI의 심화·확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CMI가 약정을 맺은 국가들의 금융위기시 이를 구원해 주는 소극적인 상호자금지원 형태에서 탈피하여 안정화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하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추가조치들을 첨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최근 제안한 CMI의 다자간협정으로서의 전환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로 5」: 엔블럭을 형성하는 방안

‘엔블럭’은 좁게는 “지역 내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엔화의 사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각국 통화를 엔화에 페그함으로써 ... 장차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통화동맹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그리고 넓게는 “일본이 그 경제규모나 기술적 우위로 인해 서태평양경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 역내 무역 및 직접투자를 급속하게 증대시키는 것”45)을 의미한다. 전승철(2004)은 엔블럭을 ‘엔화를 주요 국제결제수단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엔화에 대한 페그제 등을 통하여 엔화와의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정 그룹의 국가들’로 정의하는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46) 엔블럭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1997년 아

44) Kuroda는 (1) 치앙마이 구상의 강화, (2) 역내 채권시장의 확대발전, (3) FTA 결성을 통한 무역통합의 진전, (4) 역내 환율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의 준비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 단계인 (5) 정책수렴기준의 적용 및 이를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 등 5단계 동아시아 단일통화 도입구상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하고, 필요하다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동참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ADB (2004) 참조.

45) 최창규(1999) 참조.

46) 이와 관련하여 최창규(1999)는 일본이 주변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차관, 해외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에 이미 매우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광의의 경제 블럭이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통화의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엔블럭의 실현가능성을 논하는 차원에서 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아금융위기와 1999/2002년의 유로화 도입에 따른 국제금융통화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엔화의 국제화와도 커다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엔블럭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유로화의 등장에 따라 엔화의 국제적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서의 경험을 교훈삼아 엔블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논의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종래 일본의 국제화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었으나, 최근 들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의 엔블럭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일본은 달러권 및 유로권에 대응할 수 있는 엔블럭을 통해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아시아통화기금(AMF) 설치를 위한 제안, (신)미아자와 플랜의 제안 등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행보는 이러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⁴⁷⁾

만약 엔블럭이 형성된다면, 이는 동아시아의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무역, 투자, 금융거래 등의 분야에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큰 점과 일본이 종래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엔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엔블럭의 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의 외교 안보적 요인들과 일본 금융시장의 취약한 개방성 등의 경제적 요인들은 많은 분석가들로 하여금 엔블럭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다.⁴⁸⁾ 또, 엔블럭의 형성이 일본경제에는 환율 및 경제안정화, 화폐발행차익 발생 및 금융기관 이익의 증가 등 여러 가지의 편익을 제공하나 이를 채택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준)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해야 함에 따라 나타나는 통화정책에서의 주권제약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엔블럭의 형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⁴⁹⁾ 이에 더하여 중국의 경제 강대국으로의 부상이라는 요인도 엔블럭 형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주도국으로 부상하였는데,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과의 리더쉽 경쟁이 앞으로

47) 문우식(2000) 참조.

48) 예를 들면, 문우식(2000), 최창규(1999) 참조. 이 연구결과들은 엔블럭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1980년대에 수행된 많은 연구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주 7) 참조.

49)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승철(2004) 참조.

보다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바, 중국은 동아시아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엔블력의 형성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엔블력 형성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에 기여하기 보다는 일본의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경로 6」: Basket Peg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통화통합 모델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모델에 의해 통화통합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고려될 수 있는 대안으로 동아시아 통화들의 환율을 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를 일정비율로 조합하여 만든 복수통화바스켓의 환율변동에 연동(peg)시키는 이른바 ‘복수통화바스켓페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스켓페그의 도입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 통화들의 환율안정 및 환율변동의 공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페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 진행된 엔화의 평가절하의 결과로 동아시아 통화들의 실질가치의 고평가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경직적 환율운용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또,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IMF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가속화 등의 요인에 따라 환율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외부의 충격이 있을 때 필요이상으로 큰 환율변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자, 일부 일본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복수통화바스켓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⁵⁰⁾

통화바스켓페그제도는 미 달러화의 대외가치 변화, 경쟁국 통화의 달러화 가치 변화, 물가상승률 차이에 따른 자국 환율의 변동확대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던 달러페그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준)고정환율제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완전하게

50) 이에 관해서는 강삼모·왕윤종(2002) 참조.

치유하지는 못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강삼모·왕윤중(2002)이 제기하듯이, 바스켓 내 각 통화들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게는 변동환율제도보다 통화바스켓페그제도가 환율안정에 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의 결과이다.⁵¹⁾ 즉, 동아시아 통화의 환율변동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이 아직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변동환율제도보다는 복수통화바스켓페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환율의 안정화를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통화바스켓페그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조적 시장개입을 위한 장치의 마련 등 제도적 정비와 엔화의 바스켓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국가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⁵²⁾

앞 절의 CMI 확대발전에 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중간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를 각각 환율안정 및 공조체제의 강화, 단일통화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hin & Lee (2004)는 바스켓페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한 정도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무역 및 소비의 공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생산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조체제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이 연구결과는 바스켓페그제도를 도입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그만큼 경기의 공조화가 증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환율의 안정화 및 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비교적 우려 섞인 연구결과를 발표한 강삼모·왕윤중(2002)보다는 바스켓페그 제도의 도입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연구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통화바스켓페그 제도의 도입은 단일통화의 도입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역내 통화들의 환율안정화를 도모하는 목표가 더 강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환율의 안정화가 동아시아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51) 예를 들면, 강삼모·왕윤중(2002), Wyplosz(2001) 등이 있다.

52) Wyplosz(2001)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환율변동폭에 대한 국가간 합의와 유사시 이 변동폭 방어를 위한 협력관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통화통합의 첫걸음으로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 경로를 선택할 경우 단순한 페그의 형태보다는 환율 변동폭의 설정,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중앙은행 개입제도의 구축 및 이를 위한 회원국간 긴밀한 공조체제의 구축 등 EMS가 활용했던 많은 추가조치들을 설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경로 7」: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을 시도하는 방안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이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단일통화의 도입을 의미하는 경제통화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통적인 경제통합이론에 따르지 않고, 통화통합을 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소극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 이 방안은 아직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점쳐 보는 수준에 있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화협력 및 통합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작금의 현황을 살펴볼 때,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조차도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면, 아예 여러 전초 과정들을 생략하고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그 경우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한 후 통화통합을 무역통합에 앞서 실시하는 방안인 것이다. 둘째, 이 방안을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통화통합이 무역통합과의 연관성 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경제통합이론이 요구하는 통합단계들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경제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 통화통합을 선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한 분석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통화통합을 무역통합에 선행하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Shin & Wang(2002)은 무역통합이 통화통합에 선행해야 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무역통합보다 통화통합이 선행할 경우 역내 무역증가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산업내 무역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OCA 이론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비대칭적 충격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및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들을 들어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도 대안으

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이 연구는 통화통합을 무역통합보다 선행함으로써 현재 지지부진한 무역통합 논의를 뛰어 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통합의 긍정적 효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들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듯이 무역통합이 선행하여 산업간 무역이 보다 진전될 경우, 즉 국가간 산업입지에 관한 상호경쟁이 보다 강해질 경우, 그 이후에 진행될 통화통합의 긍정적 효과는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즉 환율공조체제 등 전초단계 없이 바로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할 경우는 그 실현성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공동관리'의 경험이 거의 없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단일통화의 도입을 '통화주권의 포기'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단일통화 도입에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유럽에서는 EMU의 전 단계로 시행되었던 EMS가 바로 '통화정책의 공동관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동아시아에 아직은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인 합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여하히 극복하는가가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관건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만약 Shin & Wang (2002)이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듯이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이 완전한 단일통화의 도입의 전 단계인 환율변동의 공조체제, 즉 구체적으로는 AMS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통화통합을 의미한다면,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을 통해 환율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통화정책의 공동관리'를 실현시킴으로써 완전한 통화통합을 성사시키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종합적 평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위해 상정할 수 있는 경로는 총 일곱 가지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류인 「경로 1」과 「경로 2」는 유럽통합과 같은 경로를 밟는다는 전제하에 상정할 수 있는 경로들인데, 「경로 1」은 동아시아 통화통

합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로로서, 그리고 「경로 2」는 가능성은 인정하되 동아시아가 유럽이 가졌던 전제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경우의 경로이나 현실적으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하지 않은 경로들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경로들은 상정할 수는 있으나, 통화통합의 과정에서 채택할 수 없는, 즉 통화통합의 프로젝트를 파기해야 하는 경로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둘째 부류에 속하는 「경로 3」의 경우 현실적으로 채택은 가능한 경로라고 할 수 있으나,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특히 EMU 모형이 EU의 모든 회원국이 같은 시점에 단일통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경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세 번째 부류로 「경로 4~7」의 네 가지 경로를 논의하였는데, 이 경로들은 동아시아의 특수여건을 고려한 경로들이라는 점에서 앞의 세 가지 경로들보다는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네 가지 경로들에 관해 보다 상세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각 경로들은 특징적인 장단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의 두 측면에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한다. ‘엔블럭의 형성’을 의미하는 「경로 5」의 경우 효율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경로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일본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엔블럭’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던 1980년대와는 세계경제환경이 크게 바뀌었으며, 특히 중국의 세계경제대국으로의 발전은 그에 따른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완전하게 극복되지 못한 동아시아의 과거사 문제도 일본의 리더쉽 역할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은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선택 가능한 경로로서 ‘엔블럭’의 의미를 크게 약화시켰음에 틀림없으며, 이에 따라 이 경로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역순에 의한 통화통합’을 의미하는 「경로 7」의 경우 「경로 5」보다는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순에 의한 단일통화의 즉각적인 도입을 의미하는 협의의 「경로 7」

이 경로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현재 동아시아에 AMS와 같은 환율안정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의 경험을 살펴보다도 단일통화의 도입을 '통화정책 주권의 포기'라기 보다는 '통화정책의 공동관리'로 이해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험은 공동무역정책의 실시 및 EMS를 통한 안정화공동체의 형성 등에 의해 가능해진 것이다. 즉, 동아시아에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역순에 의한 통합'을 추진하는 작업은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역순에 의한 통합'을 AMS처럼 역내 통화간 환율안정장치의 도입을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할 경우, 그 실현가능성은 크게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통화로 구성되는 공동통화바스켓에 동아시아 통화의 환율을 연동시키는 '바스켓페그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는 「경로 6」의 경우 「경로 7」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 바스켓에 엔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환율안정과 경기순환의 공조화를 위해서는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달러화에만 페그를 했던 금융위기 이전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통해 환율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역내국간의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일통화의 도입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환율의 안정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경로인 관계로 이 경로 이후의 단일통화로의 이행이 그다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CMI를 확대·발전'시키는 「경로 4」는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공히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경로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13개국 중 대다수가 이 제도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자간 협약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동 제도를 다자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환율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유럽의 경험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단일통화의 도입을 장기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면,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안정화공동체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실현가능성과 효율

성 측면에서 「경로 4」는 매우 바람직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마지막 단계인 동아시아 단일통화의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끝으로, 이 종합적 평가에서 논의된 마지막 네 가지 경로들은 기본적으로 EMU 모형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동아시아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모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에서 효율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경로 4」의 경우에도 CMI를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되, 마지막 단계인 단일통화의 도입 단계에서는 일정한 가입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화통합에 가입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차적인 통화동맹이 출범한 후에는 현재 EMU가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ERM제도⁵³⁾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미가입국 통화의 환율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이들의 가입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한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 경험에 비추어 보아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가능한 경로를 분석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수년 동안 논의되었던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에 관한 소개를 시작으로 EMU 모형이 동아시아에 주는 일반적 시사점과 동아시아의 정치경

53) 현재 EMU가 실시하고 있는 새로운 ERM제도는 'ERM II'라고 불리는데, 이는 유로화와 유로화 미가입 EU 회원국들의 통화 사이의 환율변동을 제어하는 기구이다. 이 제도는 유로화와 각 통화간의 환율변동을 상하 15% 내로 제한하고 이를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ECB와 해당국 중앙은행이 개입하여 안정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종래의 ERM제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재 ERM 가입대상인 13개국(영국, 덴마크, 스웨덴 및 2004년 5월 EU에 신규 가입한 10개국) 중에서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4개국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ECB는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통화가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ERM과 차별화되고 있다.

제학적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동아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통화 통합 경로들의 장단점을 논의했는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EMU의 경험이 다른 지역의 통화통합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유럽통화제도에 의해 가능해진 유럽연합 회원국간 안정화공동체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안정화공동체의 정착은 한편에서는 유럽경제의 전반적인 안정화 수렴에 기여하여 단일통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EMU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단일통화의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통화정책 주권의 상실' 현상을 회원국들이 '통화정책의 공동관리'라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본 연구도 동아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장단점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대안들의 안정화공동체의 구축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한 판단의 논거로 삼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국가들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적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통화통합에 긍정적인 요소들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혼재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경제발전수준의 다양성, 안정화공동체 경험의 결여, 과거사의 불완전한 극복 등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은 실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감지되고 있는 국가간 결속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이를 위한 CMI 등 다양한 협력 장치들의 채택 및 점증하고 있는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실험 사례 등은 통화통합을 위한 환경요인을 크게 개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화통합 시나리오의 체계도는 동아시아가 EMU 모형을 따르고자 할 경우 세 가지, 그리고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네 가지 등 총 일곱 가지의 대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일곱 가지 대안들 중에서 통화통합프로젝트를 파기하는 「경로 1」과 「경로 2」는 실현가능성을 논의할 수가 없으며, 동아시아가 엔블럭으로 발전하는 「경로 5」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실현가능한 네 가지의 통화통합 경로에 대해 본 연구는 이 경로들이 동아시아가 통화통합을 통해 보다 격상된 경제통합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간목표로서 안정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있어서는 특히 유럽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시아통화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역내 통화들의 환율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화수렴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실현가능한 네 개의 대안들에 대해서 본 연구는 실현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CMI를 확대·발전시키는 「경로 4」를 가장 유력한 경로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위기를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또 이미 13개국 이 CMI에 참여하고 있으며, CMI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들은 본 연구가 「경로 4」의 실현가능성과 효율성을 여기에서 논의된 어떠한 경로보다도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MI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간목표인 안정화공동체의 경험 축적과, 더 나아가서 최종목표인 단일통화의 도입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로 4」를 선택한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통화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삼모·왕윤중. 2002. 「동아시아 통화바스켓페그제도에 대한 평가」. 『KIEP 세계경제』, 2002. 2, pp. 46-56.
- 김세원. 2004. 『EU 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 김태준·유재원. 1999. 「아시아 외환위기와 지역통화제도의 모색」, 『국제통상연구』, 제4권 제1호, pp. 43-69.
- 김홍중·박성훈. 2003. EU집행위 관계자 면담자료. Mimeo.
- 김홍중·박성훈. 2004.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

- 문우식. 2000. 「EU의 지역통합과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Mimeo.
- 신관호 · 왕윤종 · 이종화. 2003.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 · 편익 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3-01.
- 윤덕룡 · 정재식 · 조중화. 2002.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02-01.
- 이재승. 2001.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가능성 모색: 유럽통화통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책연구과제 2001-4. 외교안보연구원.
- 전승철. 2004. 「동아시아지역 통화협력 방안에 관한 최근 논의와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50호. 한국은행.
- 최창규. 1999. 「유로화 출범과 엔블럭 형성가능성: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9년 한국EU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월 27일)
- Angeloni, I. & L. Dedola. 1999. "From the ERM to the Euro: New Evidence on Economic and Policy convergence among EU Countri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 4.
- Apel, Emmanuel. 1998.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1958-200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Asian Development Bank. 2004. "ADB Review: 37th Annual Meeting." Vol. 36, No. 4, August.
- Balassa, Bela. 1961.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han-Lee, James H. 2004. "The E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Facts, Pitfalls and Challenges." Mimeo.
- Dyson, Kenneth & Kevin Featherstone. 1999. *The Road to Maastricht: Negotiating Economic and Monetary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 Eichengreen, Barry. 1993. "European Monetary Unification." I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1, pp. 1321-1357.
- Eichengreen, Barry. 1997. "International Monetary Arrangements: Is there a Monetary Union in Asia's Future?" In *The Brookings Review*, Vol. 15, No. 2, pp. 33-35.
- Eichengreen, Barry & Tamin Bayoumi. 1996. "Is Asia an Optimum Currency Area? Can It Become One? An Optimum Currency Area Index for European Countries." *Working Paper C-96-07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ley.
- Emerson, M. et al. 1992. *One Market - One Money: An Evaluation of the Potential*

- Benefits and Costs of Forming 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el, Jeffrey & Shang-Jin Wei. 1994. "Yen Bloc or Dollar Bloc?: Exchange Rate Policies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n Takatoshi Ito and Anne Krueger eds. *Macroeconomic Linkage: Savings,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to, Junichi & Koichi Hamada. 1994. "Economic Preconditions for Asian Regional Integration." In Takatoshi Ito and Anne Krueger eds. *Macroeconomic Linkage: Savings,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eong, Se-Eun & Jacques Mazier. 2004.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Regimes in East Asia: Assessment and Lessons." In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 2, No. 1, pp. 1-32.
- Kang, Sammo & Yunjong Wang. 2002. "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In Choo, Han Gwang & Yunjong Wang eds. *Currency Union in East Asia*, KIEP Policy Analyses 02-01, Seoul.
- Kawai, Masahiro & Haruhiko Kuroda. 2004. "The Region's New Financial Architecture Needs Support." In *Financial Times Special Report on Asia's Financial Integration*, September 4.
- Kwan, C.H. 1998.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n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Yen Bloc in Asia." *Mimeo*, Nomura Research Institute.
- McKinnon, R. 1963.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pp. 717-725.
- Moon, Woosik, Rhee Yeongseop, Yoon, Deok Ryong. 2000. "Asian Monetary Cooperation: A Search for Regional Monetary Stability in the Post Euro and the Post Asian Crisis Era." In *Economic Papers*, Vol. 3, No. 1, pp. 157-193, Bank of Korea.
- Mundell, Robert. 1961. "A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4, No. 4.
- Nuo Ing, Joanne Tan. 2003. "The Possibility of an Asian Monetary Union Drawing from the EMU Experience." In *Asia-Europe Journal*, Vol. 1, No. 1, 381-401.
- Park, Sung-Hoon. 2001.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ism: Finding a Balance between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In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4, No.1.

- Park, Sung-Hoon. 2003.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of the EU." In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 1, No. 1, 2003, pp. 1-23.
- Scollay, Robert. 2001. "New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A paper presented at the 2001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Conference on "APEC: Heading Towards New Century and Bright Future", in Tianjin, China, held on May 18-20.
- Shin, Kwanho & Yunjong Wang. 2002. "Reverse Sequencing: Monetary Integration ahead of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KIEP Discussion Paper* 02-08.
- Shin, Kwanho & Yunjong Wang. 2003. "Trade Integration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East Asia." *KIEP Working Paper* 03-01.
- Taguchi, Hiroo. 1994.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apanese Yen." In Takatoshi Ito and Anne Krueger eds. *Macroeconomic Linkage: Savings,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lace, Helen, & William Wallace. 2000.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Four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 Martin. 2004. "Asia needs the Freedom of Its Own Monetary Fund." In *Financial Times Special Report on Asia's Financial Integration*, September 4.
- Wyplosz, Charles. 2001. "Regional Arrangements: Some Lessons from Postwar Europ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Role of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Experiences of Europe,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organized by the Forum on Debt and Development in Prague on 21-22 June.
- Wyplosz, Charles. 2004. "Financial Instability in Emerging Market Countries: Causes and Remedies." A paper presented at Leading Experts Seminar, hosted b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on October 7.

朴成勳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 EU학회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2000~2003년 한독경상학회 편집위원장직을 역임하였다. 1992년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3~9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로 유럽 및 아시아경제통합, 국제통상정책 및 WTO 규범 등을 연구하고 있다. 2003~2004년 미국의 UC San Diego에서 폴브라이트 교환교수를 지냈다. *Optimale Handelspolitik unter verschiedenen Wettbewerbsbedingungen*, 『신국제투자 규범 현황과 대응전략』 등 10권의 저서와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Strategy of the EU”,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지역주의: 현황과 전망」 등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金興鍾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EU학회 이사겸 『EU學 研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Oxford University에서 Honorary Fellow를 역임하였다.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EMU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중·동구 EU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가입에 대한 시사점』 등의 저서와 “Are the New Member States really Integrated to the Incumbents?”,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les of the US and the EU” 등 유럽경제 및 한-유럽 관계와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Sung-Hoon Park

Sung-Hoon Park is Professor of 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He acquired his Ph.D. in economics from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in 1992, and was research fellow wi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for four years before he joined Korea University in 1997. Professor Park has held a visiting professorship at Ritsumeikan University in Kyoto, Japan, and taught as a Fulbright Visiting Scholar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during 2003-2004. He published numerous monographs and articles, focusing on European and Asian integration, international trade policy and WTO rules. In SOM III of APEC held in October 2004, Professor Park was nominated Expert in 2004 IAP Peer Review of Russia.

Heungchong Kim

Heungchong Kim is Head of the European Studies a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in Seoul, Korea. He is currently a member of steering committee of EUSA-Korea and serves as an Editorial Board member of Journal of EU Studies. He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a member of High Table of Christ Church at Oxford. He is an expert in the European economy and Korea-EU economic relations. His most recent publications include "Are the New Member States really Integrated to the Incumbents?: A Gravity Analysis on the Bilateral Trade Performances in the Enlarged EU"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2004),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les of the US and of the EU" (Asia Europe Journal, 2003), "Diversity,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in Sub-Saharan Africa" (Journal of EU Studies, 2003), "A Derivation of Korean Potential Exports to Af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2002), and "Capital Accumulation and Bipolarization of Regional Growth"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001). He is an author of several books including EU Enlargement in 2004 and the Changing Landscape of the European Economy (KIEP Policy Analysis, 2003), Political Economy of the EMU Negotiations and its Implications to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KIEP Policy Analysis, 2004) and many others.